



대한건설협회 성공 올림픽 지원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8일 협회 본회(회장:유주현)와 공동으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8,000만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성금을 전달했다.



건설단체 올림픽 지원협약 전국 건설단체들과 강원도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8000만원 상당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교육원, 건설공제조합이 모두 5000만원 상당의 올림픽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건설업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힘 모은다

성금 9500만원 지원 협약... 유주현 건협 회장 “평화와 화합의 장 되길”

건설업계가 전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잔치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은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협 강원도회(회장 오인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금 8000만원을 전달하는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건협 서울특별시회(회장 허송)도 최 지사에게 평창올림픽 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과 건설업계 대표들이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성금 지원식을 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최를 위해 건설업계가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자

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송 건협 서울시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은 오는 2월9일부터 25일까지이며, 패럴림픽은 3월9일부터 18일까지다.

김태형기자 kth@

작년 강원 건설사 공공 수주 '1.4조'... 1년만에 하락 전환

강원도 건설사들의 연간 신규 수주액이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서 올해 수주액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18일 집계한 지난해 도회 회원사의 공공 공사 수주 실적 자료를 보면 도내 건설사의 작년 수주액은 1조4816억원이다. 전년도의 수주액 1조4832억원보다 소폭(0.1%) 감소했다.

2015년 1조2984억원이던 도내 건설 수주액은 2016년에는 1조483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막바지 공사 물량이 있었고, 접경지역

건협 강원도회 집계

올림픽 막바지 공사 등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 그쳤지만

올해 대안 없어 큰폭으로 줄 듯

업계 경영난 우려... 대책 필요

을 중심으로 군부대 시설 공사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그나마 수주액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이 가오면서 공사 물량이 다소 있었다”면서 “최근 증가한 군 관련 시설공사도 일정 수



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도내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계올림픽 이후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사업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건설업계의 우려를 키

우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설계 예산이 올해 반영됐지만 실제 도 건설업계의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강릉-제진 철도와 제천-삼척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연장) 등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들은 언제 예산이 반영될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발주 물량 감소는 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발주물량이 줄어들면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저가 낙찰 우려가 커진다. 실제 공공건설 공사 비중이 높을수록 적자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주 물량 확대는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업계 “박한 공사비 산정체계·불합리한 입찰제도 바꿔야”

건설업계 대표들은 18일 간담회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에게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등 공사비 문제와 함께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불합리한 발주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구 세진종합건설 대표(건협 전남도회장)와 김기범 SK건설 상무는 각각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의 낙찰률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수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이 17년째 그대로”라며 “더구나 실적공사비가 10년간 36.5% 떨어졌고, 표준품셈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돼 입찰가격평가가 순공사비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예정가격의 80~87.8%인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을 약 10%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 투찰과 가격경쟁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한 중심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상무는 “중심제 낙찰률이 평균 79.4%(조달청)로, 최저가낙찰제 당시의 75%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인 하락세”라며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의 상·하위 제외비율을 20%로 똑같이 맞추고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선을

“중소건설사 주로 수수하는 적격심사제 17년째 제자리 낙찰하한율 현실화 시급”

“저가투찰·가격경쟁 부르는 중심제 평균낙찰률 올려야” 건설업계 건의사항 쏟아져

±18%에서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형근 삼성물산 상무는 “유찰된 기술형입찰공사(대안·일괄·기술제안)의 수의계약 전환 시 최소 협상가격 기준을 기술형입찰공사의 평균 낙찰률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이보다 더 낮은 중심제 평균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지 상무는 또 △물량내역서 내용 및 산출내역서상 가격 조정 시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 △발주기관 제안으로 조정된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허용을 건의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배인호 성호건설 대표(건협 경북도회장)는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관련, 일반관리율 상향(6%~8%)과 간접노무비율 현실화를 주문했다.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충북도회장)와 오인철 대성종합건설 대표(강원도회장), 허

송 철광종합건설 대표(서울시회장)는 각각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지양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물량 축소,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적정 발주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덕인 정일종합건설 대표(건협 인천시회장)는 “조달청 시설공사 자체 가격은 ‘단급 자재’ 구매 시만 활용하고 사

급 자재’에 대해선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현태 정명건설 대표(건협 부산시회장)는 “군부대 등 경제시설공사에 주로 쓰이는 금속재 울타리 등은 설계·시공까지 포함하지 말고 물품 구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

새해부터 개정·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기술자 경력산정 기준 ‘모호’, 시작부터 혼란

행정안전부가 퇴직공무원 퇴출을 목표로 올 1월1일부터 시행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운용 시작단계에서 빠져서리고 있다.

실무 경험을 갖춘 차명기술자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기준이 제시됐지만, 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시행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했다.

세부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반영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에서 1점을 분리해 실제 현장 경력기술자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롭게 반영된 1점은 해당사업에 참여

2010년 이후 발급된 증명서 ‘책임정도’란에 공백상태 많아 정정요청 빚발, 협회 업무 과부하 지자체에선 혼선 탓에 미적용도 행안부 “일정기간 유예 부여” 방침

하게 될 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50%만 적용) 경력기간 합산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2010년 2월3일(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일)을 기준으로 합산 비율이 30% 이상일 때에는 1점, 20~30% 미만은 0.5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적격심사 평가기준 시행과 동시에 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2010년 이후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사업 책임·분야별책임·분야별 참여기술자 등으로 명시됐어야 할 ‘책임정도’란이 공백상태로 있는 기술자가 많기 때문이다.

수주실적 상위 10대 기업별로 평균 300명 이상의 기술자가 경력증명서 정정요청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증명발급실 업무마저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지자체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3일 공고한 6억원 규모의 식만~사상 간(대저대교) 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 새롭게 시행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맞춰 정정공고를 냈다.

하지만 새 기준의 혼선으로 인해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다시 조정했다.

김해시도 17억원 규모의 지방도 1042호선(의동~주촌) 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지난 12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까지 접수한 상황이지만, 일주일도 지나 현재까지 기술자 면적 일정조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술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2년에 걸쳐 (엔지니어링 산업분야) 관련협회와 의견을 거쳐 마련한 (평가기준)”이라며 “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된 뒤 올 1월1일 입찰분부터 적용도록 했고, PQ 평가 이후 기술자 평가를 진행하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혼선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협회에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문제점과 업계 반응은

“퇴직공무원 배제 취지 좋지만... 지역업체 참여기회 위축”

행정안전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기술자 경력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점수 1점을 확보하려면 기술자의 경력관리가 관건이다.

총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경력기간 합산을 나눈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경력 산정 방법은 평가대상자가 사업 책임 1인, 분야별 책임 4인 등 총 5명일 때 이들 중 경력을 분모로 한 뒤 기술자별 해당분야의 경력기간(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을 분자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력관리 수년째 방치 ‘공백’ 중복기간 제외 불합리성도 “현황 파악 못한 탁상행정” 지적

그러나 기술자들의 이러한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경력관리는 수년째 방치돼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그동안 PQ 제출 시 필요한 부분은 직무 등 담당업무와 참여기간이었을 뿐 ‘책임 정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논란은 또 있다. 수행용역별 경력 합산 적용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건의 설계용역을 각각

△도로분야 사업 책임(2017년 1월1일~12월31일) △단지분야 분야별 책임(2017년 2월1일~2018년 1월31일) △철도분야 분야별 참여(2017년 5월1일~2018년 4월 30일) 방식으로 수행했다고 하자.

A씨가 도로분야 기술용역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책임기간은 ‘인정일 기준’에 따라 실제 과업을 수행한 1년이 아닌 중복기간을 제외한 2개월만 적용된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도로분야 1년을 기술용역참여 기간으로 합산할 때 적격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복기간이 제외되면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구조다.

무등록 기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술자 상당수는 건설현장에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마무리한 뒤 본사로 복귀하더라도 신규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

월 이상 별도의 과업수행 이전까지는 사실상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문제는 대기기간을 분모에 포함하게 될 때 발생한다.

총 경력기간은 늘어나지만, 대기기간은 실제 과업수행 경력에서 빠진다 보니 경력합산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 밖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기술자 과업수행 경력을 합산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을 배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안부의 현행 평가기준으로는 실무 경험을 갖춘 기술자 경력 평가시 30% 이상 비율을 맞추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지역업체에서는 기술자들의 실무경력 미흡으로 용역 참여 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